

## 들어가며

6월 5일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2월 25일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과한 100일 동안의 짧은 기간은, 이른바 '참여농정'의 기본틀을 잡고 농정공약 사항의 점검·실행 준비를 하는데도 버거운 기간이었다. 게다가 농업 내외부에서 잠재해 있던 각종 사회적 갈등 현안들이 연이어 폭발하면서, 참여정부는 이를 조정·해결하는 데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출범 100일째를 맞는 참여정부의 농정 추진에 관련한 정밀한 평가 및 대안 제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잘못된 농정철학과 농정수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근본적인 농업·농촌 회생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면 농정과제 추진에 관한 점검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이번 "월간 한농연"에서는 출범 100일째를 맞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공약 추진 상황을 간략히 점검하고, 참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농정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한농연이 발표한 "대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및 11월 5일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제시한 대선 농정공약 사항을 토대로,

# 노·무·현 참여정부의

## 농정공약 이행 상황과 발전 방향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공약 이행 상황

그렇다면 출범 100일째를 맞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공약 이행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12만 한농연 회원들이 요구해 온 당면 농정현안 해결과 중장기적 농업·농촌 회생대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작년 7월 발표된 “한농연 대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및 같은 해 11월 5일 “한농연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민주당의 대선 농정공약을 비교·검토하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공약 이행 상황을 중간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들 공약중 상당수의 농정공약들이 국회

내에 계류중이거나 각종 위원회 내에서 논의·검토단계에 있어, 향후 본격적인 전개방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및 관련 정책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농가부채특별법」이 개정되어,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6.5%에 달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 인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이 공약했던 정책자금 금리 인하(1.5% 수준까지)라든지, 연대보증 피해자금 및 상호금융 대체지원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 등은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어 9월 정기국회 때에 가서야 해결될 전망이다.

### 〈참고 : 농가부채 해결 방안 비교〉

부채경감자금의 종류	민주당 (안)	한농연 (안)
○정책자금 지원조건 : 이자율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 : 16조 3천4백억원 • 이자율 : 1.5% •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 : 15조 1천억원 • 이자율 : 1% •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규모 : 2조 5,440억원 지원조건 : 이자율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자율 : 현행유지 • 상환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이자율 : 1% •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 피해자금 지원규모 : 5,018억원 지원조건 : 이자율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이자율 : 1.5% •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이자율 : 1% •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상호금융 대체지원자금 지원규모 : 10조원 지원조건 : 이자율 6.5%, 5년 내 상환		• 이자율 : 3% •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한편 농림부는 지난 달 한국갤럽에 의뢰·파악한 농가부채 실태조사 결과를 6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한농연도 같은 기간동안 자체 파악한 농가부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발표할 방침이다.

## (2) 한-칠레 FTA 국회비준 추진 및 관련 대책

한-칠레 FTA 비준 문제는 올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5월말 현재 한-칠레 FTA 비준 반대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총 141명에 육박하고 있어 비준안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FTA이행특별법」의 제정 및 7년간 총 8천여억원 규모의 「FTA이행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한-칠레 FTA 피해 규모 추산액마저도 부정확한 행정통계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5월 29일의 전국농민연대-민주당 간담회에서, 정철기 의원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준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남미시장 개척과 대외신인도 문제를 내세우는 정부내 경제·외교부처와 재계 등의 강행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국농민연대는 임시국회 회기인 6월 20일에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

국적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3) DDA 농업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 관련 대책

올 하반기 최대 이슈는 9월 10일 칸쿤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와 2004년 쌀 재협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농연은 11월 19일 대규모 중앙집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WTO 농업협상 대책과 쌀산업 보호 대책 등 당면 농정현안의 성실한 해결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DDA 농업협상의 최대 쟁점은, 우리나라의 농업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이다. 농업개도국 지위의 유지를 통해 관세율 및 보조금 감축폭 축소·전략품목 설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4년 쌀 재협상시 더욱 유리한 상황에서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DDA 농업협상에 관한 정부의 현실 인식과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며 안이하여 농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정의용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협상 과정상 아직 개도국 지위 보장을 요구할



▲ 2003년 2월 22일 '노무현대통령 - 농민단체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의 농정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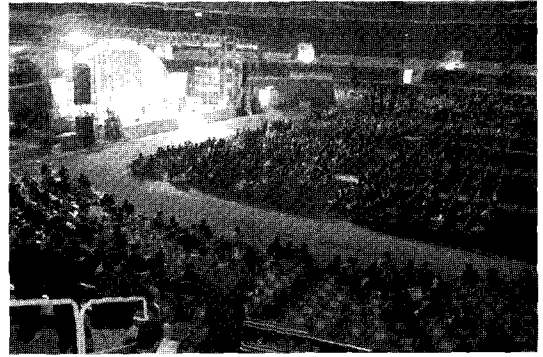
때가 아니다. 우리가 개도국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자충수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 5월 29일). 나아가 이재길 WTO 협상대사는 DDA 협상 강원도 설명회(5월 27일)에서 “농업만으로는 살 수 없다. 수출 덕분에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4%인 농업 때문에 협상을 중단할 수 없다”는 망언을 해, 정부 스스로가 설명회 개최 무산을 자초하기까지 했다.

이 속에서 코앞에 다가온 쌀 재협상에 대한 정부측의 협상 전략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마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려 하고 있으며, 농경연 및 일부 학자들까지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실시를 공공연히 주장하며 쌀 관세화 개방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논농업직불제 단가의 선진국 수준의 인상 문제 등 농가소득의 보전 방안과, 식량자급을 달성 목표의 법제화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4) 축산관련 정책(가축전염병, 수입생우, 낙농산업 등)

올 봄 전국을 강타한 돼지콜레라 파동은, 발병 지역 내 종돈장에 대한 안이한 차단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 뒤늦게 농림부는 발병지역 내 전체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나, 광범위하게 확산된 돼지콜레라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농연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방역청」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달았던 호주산 생우 수입 문제는, 수입생우 물량과 계약 내용 공개 및 도축



▲ 2002년 11월 5일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 개최 장면.

후 상장경매 등을 골자로 한우협회와 수입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도축 후 상장경매를 통해 판매할 경우 수입·사육업자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은 낙농가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인영원유차등가격제와 우유생산쿼터제 실시에 대해 낙농가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낙농진흥회의 최대 구성원이었던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탈퇴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었다. 또한 최근 원유 1리터 당 연간 15만원의 폐업·감축지원금을 제공하여 원유생산규모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안이 발표되자, 전국의 낙농가들은 분유수입 증대로 인한 원유 과잉발생 책임을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5) 학교급식법 개정 및 관련 정책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월 5일 한농연 주최 농정공약 대토론회를 통해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청소년 건

장 및 국산농산물 수급 균형 달성을 목적으로 한 농연이 2001년 하반기 제출했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9월, 권오을 의원과 정장선 의원이 제출했던 동법 개정안은 「WTO 협정 위배」를 이유로 제대로 된 심의도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후 작년 가을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재발의 되었으나, 아직껏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법 개정 움직임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야흐로 위탁급식 중심의 저질·저가의 수입 농축산물로 오염된 “반교육적인 식탁”으로만 일관하는 교육행정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결단 및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6) 농림예산의 전체 국가예산 대비 10%이상 확보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8%대 이하로 급락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중 확대 문제는, 지난 해 한농연이 제기했던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이었다. 농가소득 저하로 인한 농촌경제 및 지역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직불제 등 소득안전망 확보, 농어촌복지 문제의 근본적 개선, 통일 이후의 식량안보를 대비한 농업투융자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대응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재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업예산에 대해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으로 볼 때 맞지 않다. 직불제의 내실화 및 농어민 복지향상 등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한국농어민신문, 5월 19일).

취약한 재원 한도 내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예산 집행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회생과 농어촌복지의 개선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11월 5일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여야 각당이 약속했던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10% 확대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다.

#### (7)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및 관련 정책

작년 10월 31일 한농연이 국회에 제출한 「농어

###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문제 관련 발언록

- “(농업은) 시장원리와 별개로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 보전해야 합니다. WTO 재협상도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제8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당시)
- “농업까지 비교우위를 적용해서 농업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인데 농업문제까지 비교우위에 매몰돼서 그냥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벼랑끝에 몰려 있는 것(농업을 지칭)을 도와서 살려낼 수 있어야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은 살려내야 합니다.” (지난 해 11월 5일, 한농연 농정공약 대토론회 당시)
- “농업협동조합장 선거가 가장 타락했다는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농협을 강력히 개혁하겠습니다.” (2월 22일, 농민단체연합회 대표자와의 간담회 당시)

촌복지특별법」은 농업계 내외부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정부도 농어촌복지 대책의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농연이 제출한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 복지 정책 관련 재원 확보 도 단위 농어민종합병원의 설립 농어촌복지공단 설립 및 농어촌복지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노무현 참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농정 방향

작년 대선 당시 온갖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을 이끌어 낸 중요 지지세력 중 하나가 바로 400만 농민이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가격 및 소득 하락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농민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400만 농민들은 당시 노무현 후보를 적임자로 인식하고 기꺼이 지지표를 던졌던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성원과 기대가 이처럼 크고 열렬했기 때문에, 새 정권 출범 100일을 맞는 당면 농정 요구사항 및 이의 실천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과 2002년산 추곡수매가 결정을 위한 국회동의 등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친 「농가부채특별법」의 근본적 개정을 통해 농촌경제의 연쇄 붕괴로 인한 대란을 막아야 한다.

또한 9월 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WTO 제9차 각료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4년 쌀 재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미완으로 끝난 협동조합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민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생산·가공·유통사업에 전문화된 민주화된 경제연합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취약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고 지원단가를 높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야 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농어촌복지 수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한농연이 지난 해 제출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조기 제정 등, 농어촌복지 대책의 즉각적인 시행도 필요하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예산 대비 10% 이상으로 확충하고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공약 이행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과한 100일간의 기간은, 농정공약 사항의 점검 및 실행 준비에도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각종 농정현안에 관련된 의견 충돌이 빈발하고 있으며, 일부 논자들이 참여정부의 농정철학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할 정도로 혼선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지난 정권동안 잠재해 온 각종 사회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참여정부는 이의 해결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혼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의 식량안보 및 지역사회의 유지·

# 복수

김희승

발전을 위해 농업의 보호·희생을 중심에 둔 농정철학의 전환 및 이의 실천을 위한 성실한 공약 이행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산과 역할을 자임했던 400만 농민의 성원에 대한 보답의 길인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농심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수단 및 예산을 확보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개방화시대의 근본적인 농업회생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경북대 김충실 교수의 「국민의 정부 농정평가와 참여정부의 농정과제」 논문에서 발췌). 노무현 정부가 한국 농업의 근본적 희생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앞으로의 참여정부의 농정 전개 방향에 좌우될 것이다. **민농연**

